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전체회의 심의안건

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

기업의 탄소 산정·보고·검증(MRV) 역량 제고 방안(안)

2024. 10. 30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우리나라 탄소 MRV 현황 ····· 3

Ⅲ. 그간의 정책 평가 및 시사점 ····· 5

Ⅳ. 추진전략 ····· 6

Ⅴ. 세부 추진과제 ····· 7

1. 기업의 탄소 MRV 활용 기반 구축 ····· 7

2.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 ····· 11

3. 민·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····· 13

Ⅵ. 추진 일정 ····· 14

Ⅰ. 추진 배경

◇ 2050 탄소중립은 현재진행 중, 감소 추세 가속화 필요

□ 최근 **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탄소전원(원전·신재생에너지) 확대 등으로 감소 추세***, 이를 공고히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필요

* '21년 676.6백만톤 → '22년 652.8백만톤(-3.5%) → '23년 624.2백만톤(-4.4%)

□ 파리협정 체제에서 국가별 감축목표(NDC)도 **5년마다 강화**(진전의 원칙)

◇ 기업에 대한 국제 탄소규제는 높아지는 추세, 무역 장벽으로 부담 가중

□ EU는 기후공시 등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(사업장) 외부(Scope3, 중소기업 등)까지 **배출량 산정을 요구**

○ 또한 배터리법, 에코디자인법 등을 통해 **생산과정 外** 원료 투입 과정에 대한 **탄소 산정 요구로도 확대**

국 가	탄소규제	주요내용	대응현황
EU	**탄소국경 조정제도** ('26.1~)	· 6대 탄소다배출 수입 제품에 탄소 비용부과 * 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 등	**· 범부처 CBAM 대응 TF**('23.2~) * 산업부, 환경부 등 - 입법 개선요구, 헬프데스크 운영
	에코디자인법	· 제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	**· DPP 대응 플랫폼 구축 중**('24.10~) * 산업부,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-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으로 기업 참여 확대
	배터리법	· 배터리 탄소발자국* 공개 등 * 제품 전과정 탄소배출량	**· 범부처 이차전지 TF**('23.12~) * 기재부, 국토부, 환경부, 산업부 등 -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
	기후공시 등	· 사업장 Scope 1, 2, 3 공시 * (미국) Scope 3 제외	**·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 중** * 금융위원회(회계기준원), 환경부 등 -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('24.4. 회계기준원)

* 민간 글로벌 대기업들도 RE100, SBTi 등 자발적으로 협력사에 탄소 배출량 산정·감축 요구 中

○ 이에 대한 대응 미흡 시 우리 제품의 **수출 경쟁력 약화**와 **글로벌 공급망 배제 우려**

◇ 하지만 우리 기업의 대응 수준은 아직 낮고, 정부의 총괄 대응체계도 미비

□ 국제 탄소 규제에 대한 기업의 **인식 및 대응 수준***이 낮고, 특히 **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·인증(MRV)에 대한 부담** 호소

* 중소기업 인식 수준 평균 40점, 대응 수준 평균 31점(대한상의, '24.3.)

○ 현장에서는 정부의 교육·가이드라인 제공, 자금 지원 확대, 정보 공유 등을 요구

〈 현장의 목소리 〉

○ 국제 탄소규제 도입의 **과도기**, 정부의 일관성 있는 **방향 설정 필요**

▸ "정부의 **스탠스**와 **시그널**이 중요, 일관성이 없으면 기업이 혼란"(법무법인 A社)

▸ "유럽과 같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범부처 **컨트롤 타워 필요**"(회계법인 B社)

○ **다방면에서 높아지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·감축 요구** 대비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**국제적 합의 역시 부족한 상황**

▸ "국제 탄소규제를 기업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이유는 산정의 기술적 문제보다는 **명확한 법과 규정의 부재** 때문"(C 연구원)

▸ "대기업은 Scope 3를 산정할 체계는 있으나 **데이터 확신**이 없으므로,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주요 기업의 **모범사례** 제공 필요"(회계법인 D社)

○ 도입 시기 및 방법이 불확실한 해외 제도에 대한 **단발적 대응**이 아닌, 기업 현장 여건을 반영한 **수요자 중심의 국내 기반 강화 필요**

▸ **"납품단가 인상 없이** 인력·비용 소모되는 배출가스 산정 요구 불합리"(중소기업 E社)

▸ "어떤 정보가 필요한지, 왜 이 작업을 해야하는지 하나하나 설명 번거로움"(대기업 F社)

※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적응전문위 간담회, 자문회의 등('24.3~6)

□ 정부도 **개별 규제에는 각각 대응***하고 있으나 총괄적인 대응체계는 미흡하고, 역량이 부족한 **중소기업**에 대한 **지원방안도 부족**

* 범부처 CBAM 대응 TF('23.2~), 범부처 이차전지 TF('23.12~) 등

⇨ **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핵심인 ①기업의 탄소 산정·보고·검증(MRV)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, ②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**

Ⅱ. 우리나라 탄소 MRV 현황

	제품 단위	사업장 단위	국가 단위
배출량 산정 레벨 (OECD 기준)	개별 제품, 원료 등 (환경성적표지제도,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)	사업장, 공정 등 (배출권거래제, 목표관리제)	산업, 폐기물 등 (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)
목적	제품 탄소발자국 정보제공	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	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전략 수립
산정 (Measurement) · 보고 (Reporting) 주체(기관)	공급망 내 제품 생산업체 등	할당대상업체·온실가스배출 관리업체 등 (Scope 1·2) *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7조	분야별 관장 기관 * 「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」제14조
검증 (Verification) 주체(기관)	지정 전문기관	지정 전문기관	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GIR)
국제사회 요구	배터리 여권 등 전과정 평가 요구	기후공시 등 배출량 산정·공개 요구	UNFCCC(파리협정) NDC 수립·이행
관리현황	탄소발자국 자발적 참여 부족 - 기초 원부자재, 전력·스팀 등 에너지 전과정 탄소 정보 DB 부족	非대상 (중소)기업 배출량 MRV 체계 부재 - 배출권거래제, 목표관리제 대상 外 Scope3 上 중소기업의 배출량 산정 지원 필요	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총괄

⇨ 가치사슬 전과정으로 국제 탄소규제가 확대되고 있어, 현재 미흡한 기업의 탄소 산정·보고·검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 지원 강구 필요

참고 : 국내 제품·사업장 탄소 배출량 관리 제도

1 제품

① 환경성적표지제도 환경부

○ **(근거)**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8조

※ (산정방법) 「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」(환경부고시 제2024-29호)

○ **(내용)** 제품의 전과정 환경성(탄소발자국 등)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

○ **(참여기업·제품 수)** 501개 기업, 2,535개 제품에 대해 인증

②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산업부

○ **(근거)**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1조·제23조,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「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」

○ **(내용)**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의 전과정에서의 탄소발자국 산정 결과 검증

○ **(공인검증기관)** 8개 검증기관 지정·관리 중

2 사업장

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환경부

○ **(근거)**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

※ (산정방법) 「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고시 제2024-155호)

○ **(대상)**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,000tCO2eq. 이상인 업체 또는 25,000tCO2eq.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

○ **(참여기업 수)** 할당대상업체 783개 사업장 참여

②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부문별 관장부처

○ **(근거)**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7조

※ (산정방법) 「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고시 제2024-22호)

○ **(대상)**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50,000tCO2eq. 이상인 업체 또는 15,000tCO2eq.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

○ **(참여기업 수)** 관리업체 228개 사업장 참여

Ⅲ. 그간의 정책 평가 및 시사점

□ 정책 평가

○ 정부의 탄소중립 **지원정책이 다방면으로 추진** 중임에도, 기업의 **인식·대응 수준** 및 **탈탄소 전환 성과 미흡**

○ 국제사회의 탈탄소 요구는 **폭발적으로 확대**되고 있으나, 이에 대응하는 **총괄 대응체계** 및 **제도 미비**

○ **기업 수요**에 부합하는 **맞춤형 지원방안 확대 필요**

□ 시사점

① **탄소 배출량 산정·보고·검증(MRV) 및 지원체계 정비 필요**

② 부처 간 기능·강점을 활용한 **유기적 협력 대응체계 구축**

③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**실효성 있는 제도·인프라 마련**

⇨ **국제 탄소규제 대응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,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탄소 산정·보고·검증(MRV) 역량 제고 추진**

【 기업 탄소 MRV 역량 제고 방향 】

기존에는 (AS-IS)	앞으로 (TO-BE)
기업의 탄소 MRV 대비 부족	선제적 탄소 경쟁력 확보
단기 자금지원 위주	+ 제도화·인프라 구축
정책 공급자 중심	정책 수요자 중심
기관별 산발적 지원	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

Ⅳ. 추진전략

목표	**국제 탄소규제 대응과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망 내 기업의 탄소 MRV 역량 강화**

추진 전략	**1. 기업의 탄소 MRV 활용 기반 구축**	□1 **제품 탄소 배출량 DB, 산정방법, 플랫폼 마련** ①범부처 LCI DB 구축, ②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확충, ③국제 통용성 확보, ④데이터 플랫폼 구축 □2 **사업장 MRV 기준 마련 및 규제 맞춤형 대응** ①범용 MRV, ②규제 맞춤형 MRV 체계 구축
	2.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	□1 **수출 중소기업에 제도 절차별 컨설팅 제공** ○ 국제 탄소규제 전방위 대응 지원 □2 **중소-대기업 협력 파트너십 확대** ○ 컨소시엄 지원을 통한 공동 대응 활성화
	3. 민·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	□1 **「범정부 기업 탄소 MRV 지원 협의체」 구성·운영**

V. 세부 추진과제

1 기업의 탄소 MRV 활용 기반 구축

① 제품 탄소 배출량 DB, 산정방법, 플랫폼 마련 에코디자인법, 자동차 LCA, 배터리법 등

공급망 내 기초 원·부자재, 에너지 등의 탄소발자국 산정 원단위(LCI DB)를 구축, 아울러 국제 규제에 대응하는 제품 특성별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개발·확대

① **(범부처 LCI DB 구축)** 분야별 관계부처·전문가가 참여하는 「LCI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」를 구축·운영하여 **LCI DB 구축 본격 가속화**

○ **(현황)** '28년까지 국가 LCI DB 1,000여개로 확대 구축 중

* 개발된 국가 LCI DB는 UNEP 플랫폼인 GLAD(Global LCA Data Access) 등록·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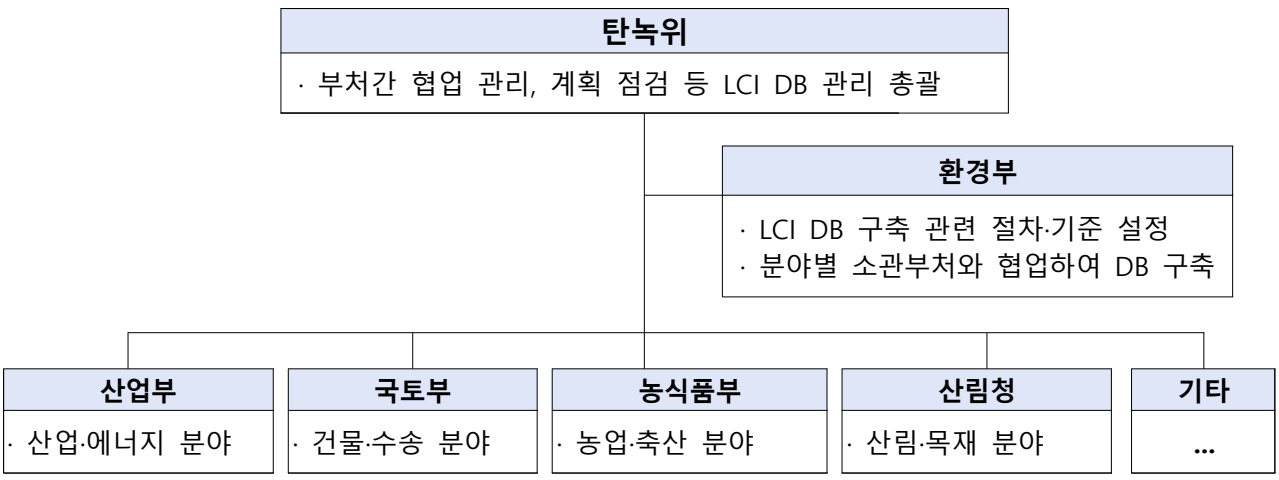
구 분		품목별 LCI DB 구축 대상	
1단계 ('22~'23)	수출규제 및 기반산업	320개	에너지 및 연료, 기초화학물질(I), 금속 및 비철금속, 수자원, 재활용 및 폐기, 육로 및 해양 수송 등
2단계 ('24~'25)	탄소배출량 및 수출품목	400개	기초화학물질(II), 플라스틱, 섬유, 자동차/배터리, 건설자재, 특수목적용 수송 등
3단계 ('26~'28)	탄소중립 이행	280개	수소, CCUS 등 탄소중립 기술, 1~2단계 LCI DB 개정

※ **(예산)** '22년 48.5억원, '23년 50.1억원, '24년 50.1억원, '25년 75.1억원(정부안)

○ **(개편) 탄녹위 총괄** 하에 △환경부 - △분야별 소관부처 간 **협의체 구성**

→ 구축계획 검토·협업 등 全 부처 역량·자원 결집하여 LCI DB 본격 가속화

< LCI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(안) >



② **(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확충)** LCI DB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산정가능하고, 우리 기업의 제품 특성이 반영되도록 마련

○ **(환경성적표지*)** 배터리 등 수출규제 제품·주력수출품부터 우선 개발, 탄소 多배출 품목 및 전자제품·탄소자원화 기술 등으로 확대

* 국제적인 제품환경발자국(Product Environment Footprint, PEF) 제도와 통용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개정안 旣 발의('24.8)

○ **(국제표준) EU 규제**(에코디자인 등) **대상품목**을 중심으로 국내 여건·제품 특성을 고려한 **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국제표준 제정***

* 배터리, 디스플레이, 에어컨, 세탁기 등 수출 주력품의 국제표준 단계적 개발('25~)

○ **(민간확대)** 인증심사 민간인력을 확충*하여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, 공공기관이 전담해 온 인증업무를 중장기적으로 **민간기관에 개방 추진**

* 관련 교육 확대 : 환경부 年 2회 → 4회, 산업부 年 3회 → 6회

< 제품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개선방안 >

제도명	관련부처	인정기관 (인·검증기관 지정 및 폐지)	운영기관	인·검증기관
환경성적표지 인증 연계	환경부	환경부	한국환경산업 기술원	민 간
국제통용 발자국 검증	산업부	국가기술표준원	한국생산기술 연구원	민 간 (현행) 8개 (개선) 10개 이상

③ **(국제 통용성 확보)**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 인증기관과 검증서 **상호인정협정 확대** 추진

< 국제 통용성 확대 현황 및 계획 >

환경성적표지제도 (환경부)	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(산업부)
△ 한-노르웨이 환경성적표지(EPD Norge)간 상호인정협정(MRA) 체결('24.11) △ 한-스웨덴간 업무협약('24.11) 및 MRA 체결(~'25) △ EU 내 EPD 운영 국가(독일·스페인·프랑스 등)와 MRA 체결 확대('~27)	△ 한-이탈리아 탄소발자국 검증제도(CFI)간 상호인정협정(MRA) 체결('24.11) △ 인정기구 간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(IAF-MLA)로 협정가입국(93개국) 간 검증서 통용 계기 마련('24.12)

④ **(데이터 플랫폼 구축)** 공급망 內 기업들의 영업비밀 등은 보호하고 표준·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교환하는 플랫폼 구축→EU·日 등과 연계

○ **(개요)** 데이터를 중앙 플랫폼에 저장하는 '데이터 레이크' 방식이 아닌, 기업의 데이터주권(영업비밀)이 보장되는 **'데이터 스페이스' 방식*** **채택**

* EU(Gaia-X, Catena-X), 일본(Ouranos Ecosystem)은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의 플랫폼 선도 중

○ **(계획)** ① **DPP**(디지털제품여권) **등 규제 본격화 5대 업종** 우선 구축 → **11대 업종**으로 확대, ② **탄소 → 공정·공급망 등 데이터도 포괄**

* 우선추진 5대 업종 : 철강·알루미늄, 배터리, 자동차, 가전, 섬유
11대 업종 : 5대 업종 + 비철금속, 석유화학, 정유, 시멘트,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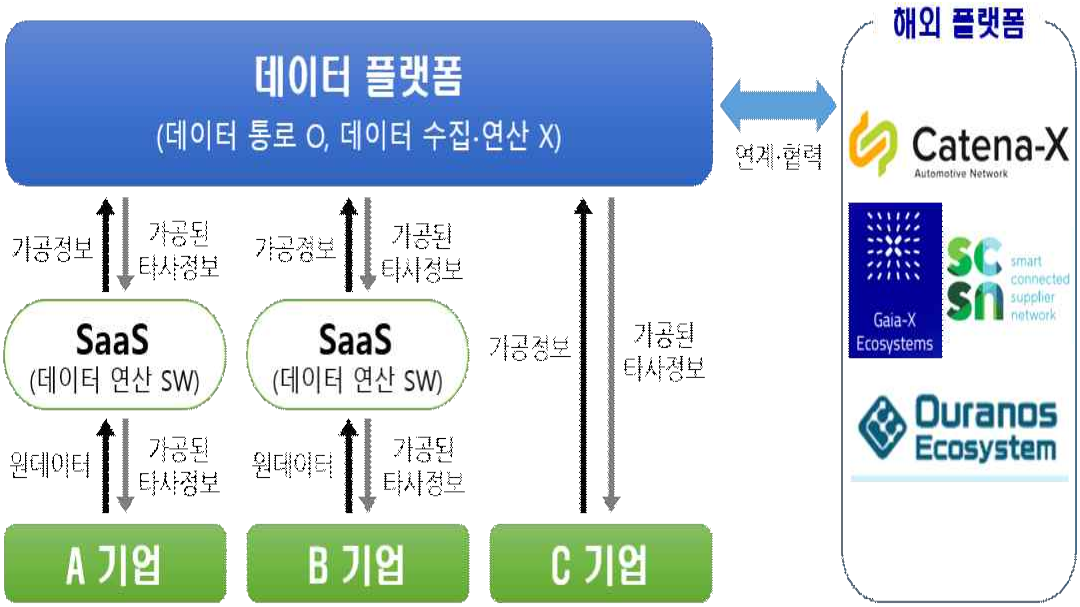
- **플랫폼** 설계를 위한 **가이드라인**을 도출(~'25.上)하고 이를 기반으로 **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(~'27)** 및 **'산업데이터 플랫폼'으로 확장**

- EU·日 정부*와 **플랫폼간 결과값 상호인정** 추진하는 등 협력 강화

*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(Catena-X), 일본 경제산업성(Ouranos Ecosystem) 등

⇨ **업종별로 기업들을 연계**하는 **데이터 스페이스 방식**의 **공공 플랫폼** 구축을 통해 **공급망 기업의 탄소관리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**

<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의 플랫폼 개념도 >



2 사업장 MRV 기준 마련 및 규제 맞춤형 대응 기후공시, CBAM, ESG 경영 등

기후공시 등 Scope 3로 확장되는 국제 탄소규제에 맞춤형 산정·검증 체계 구축,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MRV에 손쉽게 참여하는 기반 마련

① **(현황)** EU는 일부 非EU 상장기업에 **탄소배출량 공개 요구** 예정('28회계연도~), 글로벌 대기업도 중·소 협력사에 탄소 감축 요청

○ 현재 사업장 단위 MRV는 할당대상업체 등 **일부 기업에 한정되며,** 기후공시 등 국제사회의 요구 대비 **MRV 체계도 복잡***

* 배출권거래제의 검증제도를 중소기업이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움(사업장별 3-5백만원)

② **(개편)** 기후공시 등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는 **맞춤형 MRV 체계 구축**

○ **(범용 MRV)** 기후공시 등 Scope 3로 확장되는 국제 탄소규제에 취약한 **중소기업**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**산정기준(업종별 등) 마련 추진**

→ **국가지정 검증기관(과학원)**을 통해 **기준 부합 여부 평가** 및 **검증**

- 또한, Scope 3 배출량 산정·검증 방법도 연구(과학원, ~'26)하고, 대기업-중소기업의 **Scope 3 배출량 산정지원 기반**도 마련

○ **(규제 맞춤형 MRV)** EU CBAM 등 각 규제마다 사업장 산정방식이 구체화되는 단계에 따라 **맞춤형 대응체계** 구축

- ①**규제별 요구사항 분석** → ②기업별 쉽게 활용할 **표준 매뉴얼** 제작·보급 → ③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증하는 **전문기관 관리·육성**

< 기업 MRV 지원체계 >

탄소규제(잠정)	⇒	국립환경과학원	⇒	한국환경공단	⇒	검증기관
· (美) 청정경쟁법(안) · (EU) CBAM · (영국) CBAM 등		· 규제 유형별 MRV 체계 연구 · 검증기관 관리		· 산정·보고 매뉴얼 개발·보급 · 탄소 MRV 안내		·기업의 산정 결과 검·인증

2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

1 수출 중소기업 제도 절차별 컨설팅 제공

□ CBAM 등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대상 각 제도의 단계별 **전방위 컨설팅** 수행

○ ①[현장방문] 대상 제품 및 공정 파악 등 → ②[배출량 산정] 대상 제품별 배출량 산정 → ③[성과 분석] 기업 제품별 배출량 원단위 분석 등

< 컨설팅 추진 절차 >

기업 모집	역량강화 컨설팅 수행			결과분석
대상기업 모집	제도 개요	배출량 산정실습	보고 및 관세	결과물
·중소기업 ▶	·규제별 동향 및 중점사항 교육(임원) ·규제별 배출량 산정 교육(담당자) ▶	·업체 고유자료 수집 및 활용 방안 ·데이터 보고 방법 ▶	·보고 및 등록 시스템 사용 ·과세액 계산 ▶	·업체 고유 교육자료 작성 ·업체별 결과자료 분석

2 중소-대기업 협력 파트너십 확대

① **(상생협력) 공급망 단위 녹색경영 전환**을 위한 **원청-협력사 상생협력 지원**

○ **(지원대상)** 주력 수출 산업 연관 협력사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

○ **(지원내용)** 협력사 대상 기존 **배출량 관리체계 컨설팅**에 추가하여 **제품단위 설계·생산 컨설팅** 지원

- **(배출량 관리체계 구축)** 협력사 맞춤형 현황 진단,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방안 도출

- **(탄소저감 제품 설계·생산)** 탄소 배출 취약 **공정 감축 방안 도출** → **제품 생산 전과정**에서의 **저탄소 기술 전환 유도**

- **(규제 공동대응체계 구축)** 공급망 단위 규제에 원청기업과 협력사 공동 대응지원을 위한 **공급망 기후공시 지표·플랫폼 개발·운영**

○ **(지원방식)** 협력사가 직면한 현안을 **민·관 공동 컨설팅 → 원청의 협력사 지원 활동과 연계** 추진 통해 컨설팅 결과 현장 반영 도모

제품규제 강화 (에코디자인법, 배터리법 등) ⇨	**[기존] 기업단위** 지원	**[추가] 제품단위 전과정 지원**	⇨ **제조업 탄소 경쟁력 제고로 수출역량 강화**
	• ESG 경영체계 구축 • 사업장 CO_2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방안 도출	• 협력사 LCA 평가 지원 • 제품 전과정 CO_2 배출 감축 방안 도출 등	

○ **(향후계획)** 자동차·철강 등 주요 업종별 **정부-중소-대기업 컨소시엄 구성·확대**

② **(중점지원)** **자동차** 온실가스 **규제 대응**을 위해 **중소 부품공급사 패키지 지원**('25~)

○ **(지원대상)** 1차 부품사(완성차 제조사에 직접 공급) 대비 인력 및 기술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**2차 이후 부품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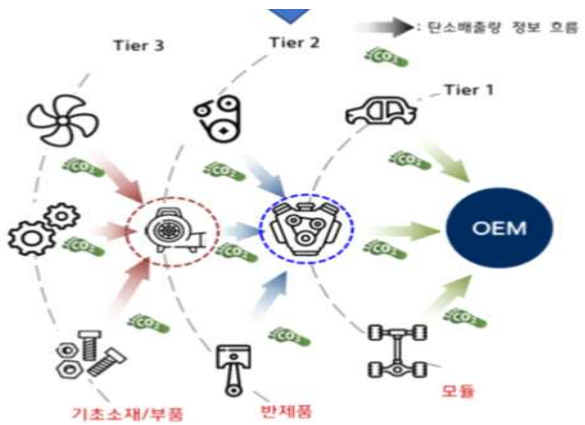
※ EU는 부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를 자동차 전과정 배출량으로 산정할 예정

○ **(지원내용)** 탄소 배출량 산정·감축에 필요한 **기초 역량 강화**

① 자동차 부품별 탄소배출량 전과정평가 및 세부 가이드 개발

② 탄소배출량 감축 여력 검토 및 자발적 감축 활동 유도·지원 등

③ 산·학·연 전문가 소통채널 운영

지원사업 흐름도	추진 일정	
	'25	△ **TIER 1 부품사**(4社) : 현장데이터 10% 사용, 전문인력 양성(20명) 및 감축방안 컨설팅
	'26	△ **TIER 2 부품사**(8社) : 현장데이터 30% 사용, 전문인력 양성(40명) 및 감축방안 컨설팅
	'27	△ **TIER 3 부품사**(12社) : 현장데이터 50% 사용, 전문인력 양성(60명) 및 감축방안 컨설팅

3 ‘범정부 기업 탄소 MRV 지원 협의체’ 구성·운영

국제 탄소규제 대응과 우리나라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·관 역량 결집

1 **(구성)** 정부, 산업계,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탄소 배출량 MRV 역량 제고를 위한 **‘범정부 기업 탄소 MRV 지원 협의체’ 구성**

○ **(운영)** 정기 회의체 개최 등을 통해 기업 규모별·업종별 교류 활성화, 민·관 협력방안 등 **주요 의사결정**

< 추진체계도(안) >

「범정부 기업 탄소 MRV 지원 협의체」
* 정부(탄녹위, 환경부, 산업부, 중기부 등), 산업계, 전문기관 등

탄소 MRV 체계 고도화	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
· 제품·사업장 탄소 MRV 제도 개선 · LCI DB 구축 관련 협력	· 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기획·연계 · 산업계 협업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

2 **(기관별 역할)** 탄녹위 중심의 민·관 합동 협업체계 구축

○ **(탄녹위)** 「범정부 기업 탄소 MRV 지원 협의체」 운영 총괄, 부처 간 역할 조정

○ **(관계부처)** 기업 MRV 지원 등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부처 간 역할 정립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, 제도 간 연계·협력

○ **(전문기관)** 탄소 배출량 MRV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·지원기관(국립환경과학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) 및 지정 검증기관의 기술 지원

○ **(주요 업종)** 국제 탄소규제 대상 주요 업종(철강, 배터리, 자동차, 섬유 등) 및 금융기관, 회계·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성 연계

< 부처·기관별 역할(안) >

환경부	산업부	중기부
· 탄소 배출량 MRV 체계 고도화 및 산정·검증 지원	· 국제 탄소규제 대응 및 산업계 MRV 협력 강화	·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인식 제고 및 참여 확산
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	한국생산기술연구원(청정센터)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

Ⅵ. 추진 일정

1. 기업의 탄소 MRV 활용 기반 구축	관련 부처	시기
[1] 제품 탄소 배출량 DB, 산정방법 플랫폼 마련	환경부·산업부	'25년~
① 범부처 LCI DB 구축	탄녹위·환경부·산업부 등	'25년~
② 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확충	환경부·산업부	'25년~
③ 국제 통용성 확보	환경부·산업부	'24년~
④ 데이터 플랫폼 구축	산업부 등	'24년~
[2] 사업장 MRV 기준 마련 및 규제 맞춤형 대응	환경부	'25년~
① 범용 MRV	환경부	'25년~
② 규제 맞춤형 MRV	환경부	'25년~
2.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	**관련 부처**	**시기**
[1] 수출 중소기업에 제도 절차별 컨설팅 제공	환경부·산업부·중기부 등	'24년~
[2] 중소-대기업 협력 파트너십 확대	환경부·산업부·중기부 등	'25년~
3. 민·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	**관련 부처**	**시기**
[1] '범정부 기업 탄소 MRV 지원 협의체'구성·운영	탄녹위·환경부·산업부·중기부 등	'25년~